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보도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험연구원
2010. 2.8(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기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담당자	손상호 박사 (3705-6358) 김필규 박사 (3771-0631) 오영수 박사 (3775-9012)
배 포 일	2010. 2. 5 (금)	배 포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합동 보험연구원

제목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심포지엄 개최

1. 개요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8(월)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후원: 금융위원회)을 개최

- ◇ 일시 : 2010. 2. 8(월), 14시~18시
-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 내용

▶ 세션1. 우리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사회 : 윤석현(한림대), 발표 : 구본성(금융연구원)
토론 : 이인호(서울대), 장경덕(매일경제 논설위원),
추경호(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세션2. 국내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사회 : 선우석호(홍익대),
발표 : 이병윤(금융연구원), 신보성(자본시장연구원),
오영수(보험연구원), 정찬우(금융연구원)
토론 : 박경서(고려대), 이봉주(경희대), 홍영만(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세션3. 국내 금융제도와 시장의 발전방향

사회 : 김대식(한양대), 발표 : 손상호(금융연구원), 김필규(자본시장연구원)
토론 : 채희율(경기대), 김영익(하나대투증권), 조인강(금융위 자본시장국장)

▶ 종합토론

사회 : 윤석현(한림대)
토론 :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이장영(금감원 부원장),
선우석호(홍익대), 김대식(한양대), 노태식(은행연합회 부회장),
장건상(금융투자협회 부회장)

2. 논의의 배경 및 의의

- ① 위기 이후 금융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 등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 금융부문의 취약요인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할 시기
 -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편논의의 국내수용 가능성 수준과 우리 금융 고유의 구조적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
- ② 다만 글로벌 차원의 금융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건전성 감독 규제 강화 문제와 드러난 문제를 정비하는 데에만 주력할 경우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육성할 기회를 놓칠 우려
 - 중국 등 경쟁국들이 자국의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움직임이 분주해진 상황에서 우리도 금융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검토·논의를 본격화할 필요
 - 특히 우리나라 금융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으로 금번 위기 과정에서 선진국 금융이 다소 위축되는 현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음

- ③ 아울러 **G20** 의장국으로서 위기 이후 전개될 금융환경 변화에 걸맞게 금융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고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제고하는 노력도 중요
- ④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지난 7월 금융위로부터 향후 10년간 우리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안 검토를 의뢰 받은 이후 3개 연구기관의 30여명의 연구진들이 7개월에 걸쳐 외부전문가와 수많은 토론 및 내부회의를 거쳐 금번 비전을 마련
- 첫째, 이번 작업은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논의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금융의 종합적인 비전을 마련
 - 둘째, 금융관련 3개 연구기관이 최초로 공동용역 연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각 권역별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
 - 셋째, 기존의 분석틀에서 벗어나 금융수요자 관점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이슈 및 당면과제를 권역별, 기능별로 즉 도매금융(whole-sale finance) 및 소매금융시장(retail finance)으로 재분류하여 조금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였음
- ⑤ 금번 작업은 우리나라 금융을 대표하는 3개 연구기관 입장에서 우리 금융의 주요 이슈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 이번 작업을 바탕으로 정책당국은 광범위한 여론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거쳐 과제별로 차근차근 정책화를 추진하기를 기대

- 특히 금번 작업을 토대로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학계·언론 등 각계 각층의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금융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과제와 세부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

※ 별첨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주요 내용

<별첨>

2010.2.8(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주요 내용

2010. 2. 8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I 장.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	1
-------------------------	---

II 장. 우리나라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4
--------------------------------	---

1. 금융의 역할 및 평가	4
2.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	9
3. 우리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14

III 장. 정책과제	21
-------------------	----

[과제1] 금융시스템 안정	21
[과제2]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31
[과제3] 금융의 글로벌화	37
[과제4]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41
[과제5] 금융시장 효율화	57

I 장.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

1. 금융환경의 변화와 전망

1. 금번 금융위기로 글로벌 **Paradigm**이 근본적으로 변화

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간 금융감독 및 운용체계의 철학적 근간을 이루었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의 한계점이 노정되면서 경제 및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됨

- * 자유주의적 시장원리 강조 →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정부역할 강조
- * 규제 완화 일변도 → 시스템리스크·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 * 대형화·겸업화·글로벌화 중시 → 안정적 성장 중시

② 특히, 글로벌 금융규제 체계도 전면적인 재정비가 요구

- 기본적으로 건전성 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감독 도입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감독 강화방안에 대한 국제 논의가 진행중
 - 특히, 그간 기업자율적 경영사향으로 인식되던 금융회사의 보상 체계·지배구조도 금융 공공성 차원에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
 - 최근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이 금융위기 책임론으로 이어져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기 책임부담금 징수 논의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를 계기로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기능 규제와 관련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또한 금번 위기를 계기로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독립 전담 기구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규제·감독의 주요 과제로 부각

2.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

- 이번 위기 과정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회복이 빠른 신흥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부상
- 또한 위기를 계기로 시스템 리스크의 확대 등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향후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겸업화 추세는 약화될 전망
 - 거대 다국적 금융회사(too-big-to-fail cross border institutions)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

3. 금융산업의 수익성·성장세 둔화 및 구조적 변화 진행

- ① 은행 : 전통적 상업은행 기능 강화(투자은행 기능 축소), 리스크 관리 및 예수금 확대 노력 강화
- ② 금융투자업 : 대형화 추세 둔화 및 전문화된 소형투자은행 활성화, 시장 및 영향력 축소, 리스크관리 강화 등
 - * 기업금융 중심의 전통적인 투자은행 시장은 지속 성장 전망
- ③ 보험 : 전통적 보험 영역에서의 다양한 상품개발 노력, 자산운용다각화 추진 등
 - * 주요국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이므로 과거(80~90년대)와 같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④ 펀드 : 헤지펀드의 보수적 운영(뮤추얼펀드와 유사한 전략 추구),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및 안정적 운영 등

4. 글로벌 여건 변화와 함께 우리의 특수한 금융 흐름도 존재

- ① 새로운 금융수요 등장 : 가계·기업의 금융수요 다양화, 고령화 및 연금의 성장, 녹색금융 등
- ② 글로벌화 진전 : 글로벌화 대상국가의 다변화(선진국에서 동아시아 국가로 확대), 국내자본의 해외이동 증가 등
- ③ 대형화·점업화 진전 :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므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진전이 불가피
- ④ 규제완화 : 선진국에 비해 발달이 늦은 분야는 추가적인 규제정비를 통해 선진금융과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

2. 향후 과제

- ☐ 우선 위기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시스템 불안정 예방 장치를 마련할 필요
- ☐ 다만 드러난 문제점 해결에만 주력하는 경우 실물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함께 위기이후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과제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논의할 필요
- ☐ 특히 글로벌 금융규제 및 세계 금융시장의 재편 모습을 감안한 금융산업의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II 장. 우리나라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1. 금융의 역할 및 평가

가. 비전 수립 관련 고려사항

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vs. 금융의 독자산업화

- ☐ 기본적으로 양립 가능한 목표이나 상충가능성도 존재
- ☐ 실물지원 기능(자금중개·지급결제·위험관리 등)과 독자산업의 기능(고부가가치·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조화롭게 달성
 - * 개방된 시장에서 선진금융회사와의 경쟁·생존을 위해서도 필요

② 겸업주의 vs. 전업주의

- ☐ 그간 국내 금융회사의 겸업화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전개
 - ※ 자회사 방식 : 업종간 상호진출 원칙적 허용
 - 업무제휴·위탁 방식 : 본질업무 위탁 금지
 - 내부겸영방식 : 은행-증권-보험간 본질업무 겸영 제한
- ☐ 금융업종 간 겸업화가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 업종간 겸업화는 현행 수준을 유지
 - 향후 겸업화는 리스크관리를 감안하여 지주회사방식으로 유도(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겸영은 현행 수준을 유지)
 - ※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60%) 규제는 현행 유지

③

대형화 여부

□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 논의가 진행 중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이후 FSB 등을 중심으로 대형금융 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와 함께 투자은행 업무와 상업은행 업무 간 차단벽 등의 규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등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아직 미국 정부의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데다 세부 방안과 관련 각국별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미국 개혁방안대로 국제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 미국 방안대로 은행의 고위험투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더라도 우리의 경우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형화 등 규모제한 문제의 경우 유럽 등 금융 선진국의 경우 상당수가 국가 규모에 비해 금융회사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정책적 견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형화'의 규모자체에 대한 규제 논의 전개는 쉽지 않을 전망

○ 특히, 선진국의 초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아직 규모 및 레버리지 비율 면에서 현저히 작은 신흥국 금융회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

⇒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글로벌 추세와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대형화' 문제를 접근

- 국내 금융회사와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격차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추세는 불가피할 전망
- 다만,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높은 레버리지 또는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은 억제하고, 특히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논의과정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

④ 금융규제의 완화 vs. 규제강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기조는 원칙적으로 유지

- 특히, 외국에 없거나 글로벌 수준에 비해 과도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

※ 특히,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만큼 동 시장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

□ 다만, 금융시스템 리스크 방지 차원의 건전성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글로벌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강화

- 실제로 규제를 제도화하고 실행하는 문제는 주요 금융 선진국보다 한발 앞서나가기 보다, 이들 국가의 제도화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추진할 필요

1. 제안 배경

- 미국에서는 금번 금융위기가 대형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와 외형확장 등 도덕적 해이*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인식 하에 이를 억제하는 차원의 금융개혁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형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어 파산될 경우 경제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부실화되더라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TBTF)**)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 특히, 위기이후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대규모 공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금융회사들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반발하면서 아직도 예금보험과 같은 공적 안전장치를 바탕으로 과다한 위험에 투자하는 과거의 잘못된 금융관행(old practices)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2. 주요내용

- 최근 오바마 美 대통령이 제안한 금융개혁방안은 크게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와 규모에 대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업무범위 규제(**Limit the Scope**)와 관련하여서는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헤지펀드, PEF 및 고객과 무관한 自社 이익을 위한 자기자본투자(proprietary trading operation) 부문을 소유·투자 또는 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

-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규모에 대한 규제(**Limit the Size**)와 관련하여서는

- 대규모 금융회사의 인수·합병(consolidation)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

3. 시사점

□ 현재 국제적으로 미국 규제 강화방안이 나온 배경과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임에 따라 FSB 등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세부방안과 관련, 각 국별로 다양한 입장이 있음에 따라 국제적 기준 마련에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 우선 영업범위(Scope)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은행권의 고위험 투자행위 자체는 미미한 수준임

○ 헤지펀드의 경우 설립실적이 없고, PEF의 경우도 '04년 제도 도입 12건 7,450억원으로 총자산(1,899조원)의 0.04% 수준에 불과

○ 또한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60%), 자회사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5%) 등 직접적인 자산운용 규제에 의해 은행권의 트레이딩 자산비중은 총자산의 5.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총자산 대비 트레이딩자산 비중 : 국내은행 5.2%, 씨티 19.5%, JP모건체이스 23.4%

⇒ 국내은행권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하에 예대업무 위주의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미국 방안대로 국제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영업범위 규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다음으로 규모(Size) 제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각국별로 시장집중도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며 우리의 경우 규모 면에서도 세계 100대 은행은 3개 밖에 없는 수준**

* 은행권 시장 집중도(CR3, World Bank('07)) : 한국(53%), 미국(34%), 일본(46%), 영국(60%), 독일(71%), 프랑스(58%), 싱가포르(94%)

** 세계 100위 은행권 내 국내은행은 3개에 불과, 1위인 국민은행도 74위 수준

⇒ 각국별로 처한 현실에 따라 입장차이가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규모제한 규제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나.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 (금융의 4대 기능 및 평가)

① 금융의 실물부문 지원 기능 측면

① 금융의 근본적 역할인 자금중개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한 실정

○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 취약

* GDP대비 직접금융(07년, %) : 日**2.87**, 英**3.63**, 스페인**2.41**, 이탈리아**2.43**, 韓**1.56**

- 특히, 고수익 채권시장 위축 및 유가증권시장의 신규 상장 정체 등으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효율적 자금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자본시장 미발달로 시장 규율을 통한 경영투명성 및 주주책임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역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취약한 상태이며 중기대출 등은 정부 보증 등에 과다하게 의존함에 따라 은행을 통한 선별 및 리스크 관리 기능도 취약

* GDP 대비 간접금융의 비중은 0.9로서 여타 선진국의 50~80% 수준이며, 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중은 2007년말 30개 OECD 국가중 16위

② 이러한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한 데에는 금융회사의 심사역량 부족 및 신용정보시스템 미비 등으로 금융을 통한 위험분산 및 관리기능이 미흡한 것도 일요인

③ 국내의 지급결제 시스템도 아직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데다 규율체계도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 규율이 없는 상태

② 금융의 新성장동력 기능 측면

① 국내금융회사의 규모, 수익구조, 세계화 정도 및 금융전문인력 등 측면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아직까지 취약

○ 우선 규모 측면에서 자산·자본 규모 등 국내 금융회사의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아직까지 작은 수준

* 세계 1000대은행(08년, 개) : 미국 159, EU 258, 일본 97, 중국 52, 인도 32, 대만 28, 한국 10

○ 수익구조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

- 은행의 경우 순이자마진 하락, 비이자수익원 미흡 등 이익 창출 능력 지속 저하

* 명목 순이자마진 : 2005년 2.81% → 2009.6월말 1.85%

-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 수수료에 과다하게 의존하며 투자은행업 및 자산관리서비스 부문 등 고부가가치 수익원은 부족

* 운영업수의 중 위탁매매수수료가 약 60%, 자기매매수익이 20%를 차지

- 보험사의 경우 다양한 위험 보장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수익원 다각화가 미흡

○ 국내은행의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TNI지수**(Trans National Index)는 4.3%로서 주요 선진국의 1/10 정도의 수준으로 글로벌화 미흡

* TNI 지수(%) : 미국 24.7, 영국 40.3, 프랑스 37.5, 독일 42.7

(TNI지수=(해외자산/총자산)+(해외수익/총수익)+(해외인력/총인력) × 100 ÷ 3)

○ 금융인력은 아시아 경쟁국인 홍콩·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금융전문인력 보다 보조 인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질적으로 미흡한 수준

* 금융인력 중 비중(보조인력/전문가+관리자, %) : 영국 71.2/28.4, 홍콩 37.0/63.0, 싱가포르 30.8/69.1, 한국 86.7/13.3

- ② 특히 국내시장에서 과당경쟁 및 쏠림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한편, 높은 부가가치 창출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은 미미

③ 금융소비자 수요충족 측면

①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 KIKO 사태, 비전문적 판매채널 등에 따른 펀드 및 보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② 아울러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이 미흡

- 상품설계 역량 부족 및 중장기 위험헷지 시장 미발달 등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공급 기능이 미흡

③ 저신용·저소득층 등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도 낮은 상태

- 그간 서민금융에 대한 상대적 관심 미흡 등으로 제도권 서민금융공급이 위축
-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소외자가 다수 발생하고 신용불량자 양산 및 가계파산 등으로 이어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심화
- 특히, 서민금융공급 부족 → 사금융이용 증가 → 신용불량자 편입 → 경제적 자립기반 붕괴로 이어져 재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초래

④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

-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금융감독 강화 노력 등으로 금번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우리 금융의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 다만,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금번위기 과정에서 외화 및 원화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상흑자 및 외환보유고 확충, 중장기 재원 조달비율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통화 미사용, 높은 대외의존도 등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며 금번 위기시 외환시장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
 - 자산운용사의 과다 환헷지 관행, 재정거래유인에 따른 외은지점 단기 차입확대 등 실물경제흐름과 무관한 단기외채 급증 등 차입구조의 취약성이 시장불안심리를 확대
- 또한 자산확대 경쟁 등에 따른 국내은행의 높은 예대율 등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확대되며 리만사태 이후 은행채 스프레드 급등·차환율 하락 등 은행권 원화유동성이 악화
 - 이와 함께 은행권의 자금확보 노력으로 자금이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무담보 콜시장 위주의 단기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며 은행·회사채·CP 등의 투매 현상 등으로 제 2금융권의 원화 유동성 상황도 악화
- 금융·통화당국의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 대책으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회복하였으나 우리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나. 한국금융의 SWOT 분석

강점(S)	▪ 교육수준 높은 인력 ▪ 소매금융 역량 및 경쟁력 ▪ IT기술 경쟁력 및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금융IT 인프라 수출
약점(W)	▪ 금융전문인력의 부족 ▪ 간접금융 중심의 자금중개기능 ▪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유사한 수익구조로 인한 과당경쟁 피해 ▪ 금융시장의 인프라 취약 ▪ 소규모 개방금융의 구조적 취약성 ▪ 국제화 추진 미흡 및 글로벌 네트워크 부재 ▪ 조직문화 및 관행 등 소프트웨어의 후진성 ▪ 조직 저변에 효율성 중심의 사고방식 결여 ▪ 금융상품 설계 능력 취약 및 상품의 다양성 부족
기회(O)	▪ 금융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율과 자체고용유발계수 ▪ 노후대비 금융수요의 확대 추세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금융수요 급성장 가능성 ▪ 위기이후 선진금융강국 위축 ▪ 수출경제에 보완적인 금융의 역할 지속 필요 ▪ 금융중심지 추진 등 글로벌화를 통한 발전 가능성
위협(T)	▪ 중국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역할 ▪ 외환시장을 통한 국제적 금융위기의 파급 가능성 상존

2. 우리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 ◇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우리 금융의 취약요인을 감안, 금융선진화를 위한 좌표를 재설정할 필요

가. 금융강국의 발전 및 시사점

- 금융강국들의 경제구조, 금융하부구조, 금융경쟁력, 금융위기 경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성장모델을 모색
- 글로벌 주도형(美, 英), 지역주도형(호주, 싱가포르), **offshore**형 (스위스), 위기극복형(북구3국), 위기취약형(아일랜드)

나. 금융비전과 정책과제

① (비전) “아시아 금융리더로 도약”(지역주도형)

- 단기 : 5년후 아시아 지역 **regional player** 출현 목표
- 중장기 : 10년후 글로벌 player 출현: ‘금융글로벌화’

<비전달성 목표(예시)>

목표 지표	현재	2015년	2020년
• 국제기관의 경쟁력 지표 ¹⁾	30위권	20위권	10위권 이내
• 금융 및 관련서비스업 비중 ²⁾	21%	23%	25%
• 글로벌자산시장 점유율 ³⁾	1.2%	2%이상	3%이상
• 아시아 top10 은행의 수	0	1개이상	2-3개이상
• TNI지수	4.3%	8%	15%

주: 1) IMD, WEF 금융부문 국제경쟁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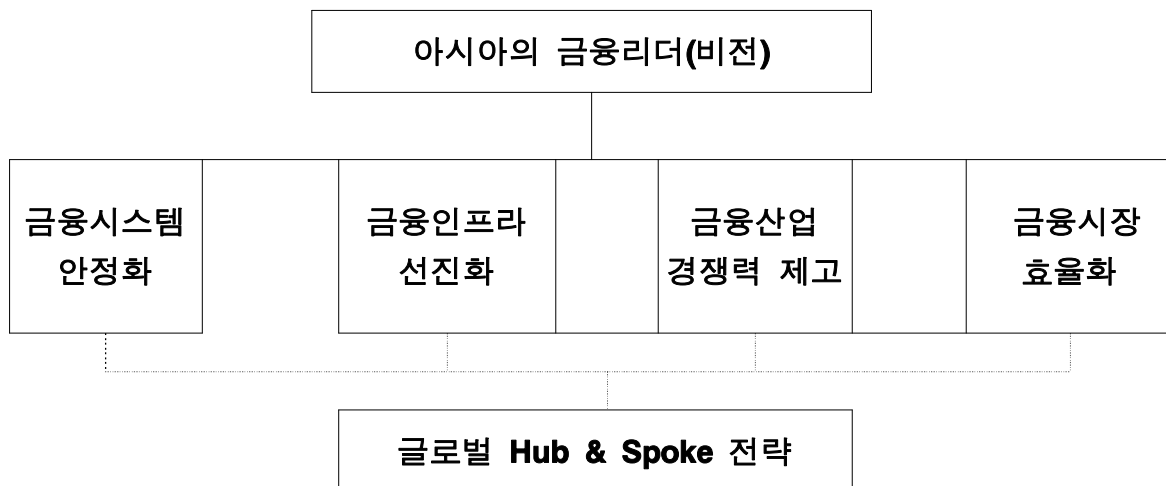
2) 2007년 기준 OECD자료

3) 펀드 순자산(2008),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②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 ① (금융시스템 안정) 구조적 취약요인 개선 및 시스템 리스크 감독 강화
- ②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산업과 시장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인력·지원체계 개선
- ③ (글로벌화 전략 추진) 금융허브 전략 + 적극적 해외진출
- ④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및 대형화
- ⑤ (금융시장의 효율화)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

<금융비전 및 정책목표>



1. 성장 모델

□ 금융선진국의 성장모델은 크게 글로벌주도형, 지역주도형, 단독국가형, 위기극복형, 위기취약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① 글로벌주도형은 **G5 이상의 경제권에 속하는 국가**(영국, 미국, 독일, 홍콩 등 주요 통화권 경제)

* 홍콩의 경우 영미와 중국경제에 의한 글로벌시장으로 평가될 수 있음.

② 지역주도형은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토대로 인접시장 또는 글로벌시장과의 연계성을 확대하는 형태(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 호주의 경우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뉴질랜드 경제권을 편입하고 아시아시장으로 기반 확대

* 싱가포르는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홍콩의 재도약으로 역할이 축소 가능성

* 캐나다의 경우 미국 경제와의 인접성과 대내시장을 토대로 금융부문을 성장시켜 왔음

③ 단독국가형(또는 offshore형)은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형 금융산업을 유치한 형태(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④ 위기극복형은 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제고한 사례(북구3국, 칠레 및 브라질 등 남미 일부 국가)

* 위기극복형 금융경제는 주로 부동산위기 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 개혁과 제도개선, 외환정책의 개편을 통해 금융안정성을 회복한 형태

*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산의 대내외 확충을 통해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정책대응을 모색한 측면

⑤ 위기취약형은 금융서비스의 확대에 의한 경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취약성이 노정된 유형(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2. 시사점

- 금융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거시경제 구조, 국내 금융경쟁력의 가능성과 한계, 금융위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장모델을 모색할 필요
 - 국내 거시경제 구조는 글로벌 개방경제의 성장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
 - 국내 금융경쟁력은 글로벌 주도형 금융강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시장에서의 리더십과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장모델을 추구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취약성과 대응력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금융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위기극복형 금융강국의 장점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
- 이에 따라 향후 국내금융은 실물부문을 기반으로 관련 해외지역에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지역형 글로벌화를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강국들과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실물부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형 글로벌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할 필요
 - 특히,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수출형 전략(naked approach) 보다도 국내 실물부문의 금융수요를 글로벌시장을 통해 충족하는 연계형(linked approach) 구조를 고려
 - *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의 경우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라틴 지역에 국한된 글로벌화를 추구하여 글로벌 top 10으로 부상

다.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본 비전의 기능별 체계

① 가계금융 이슈 (retail finance)

① 가계대출 적정관리

-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대출이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정관리 강화할 필요
- ⇒
 - 선제적 금융감독 및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
 - 저소득층 채무상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지속
 - 장기·분할·고정금리 확대(MBS 활성화, DTI 규제)

② 서민금융체계 개선

- 제도권 서민금융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서민층의 금융소외 심화 및 신용불량자 증가·가계파산 증가 등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심화
- ⇒
 - 제도권 서민금융공급 기능을 강화
 - 은행 : 자회사방식으로 저신용층 대상 소비자금융 진출
 - 저축은행 : 서민금융특화, 부실화 억제를 위한 감독 강화
 - 상호금융 : 연합회·중앙회 중심 발전전략, 조합간 합병
 - 여전사 : 소비자금융업 추가
 - 시장원리에 따른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신용층 문제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해소
 - 미소금융 등 대안금융 활성화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및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 개선

③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그간 우리는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도·감독·관행·인식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홀

- ⇒ ▪ 국제기준에 맞는 사전적·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마련
 - 민간자율기관(예:투자자보호재단 등)의 자율규제기능 대폭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 확충
 - 금융교육 강화

④ 금융서비스 다양화

-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이 미흡
- ⇒ ▪ 신상품 개발 : 고령화 대비 신상품 개발 등
 - 은행·보험사의 고객군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 펀드시장 경쟁구조 정착(펀드 판매채널 확대/자산운용사 신규진입 확대)

⑤ 퇴직연금 시장

-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보수적 자산운용 규제 등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 ⇒ ▪ 퇴직연금시장 확대 유도(퇴직금→퇴직연금제도 전환 유도)
 -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 확정기여형의 주식투자제한(40%) 완화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대한 운용규제 지속 완화

② 기업금융 이슈 (whole-sale finance)

① 금융회사 및 대기업

- 무담보 콜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외부충격 발생시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불안정성이 심화
- ⇒ ▪ **RP** 시장 활성화, 단기금융시장 지표 금리 개발, **CP** 수요를 단기사채수요로 전환 유도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

○ 채권시장을 통한 장기안정적 기업자금 지원기능이 미흡

⇒ ▪ 채권 수요확대 및 발행시장 활성화
▪ 효율적인 채권유통시스템 구축

② 중소기업

○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비효율성 및 민간 영역과의 마찰 문제 등 개선과제가 대두

○ 특히 위기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보증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

⇒ ▪ 정책금융 기관간 협조·연계강화 등을 통한 정책금융 역할·지원방식 등 효율화
▪ 한시적·예외적 보증확대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정체, 고수익회사채 시장 미발달 등으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중개 기능 미확립

⇒ ▪ 우량기업상장 확대/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 KOSDAQ의 기능 정상화

③ 도매금융 능력 제고방안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은행업 기능이 취약함에 따라 자금중개 역할 미흡

⇒ ▪ 자본확충 및 전문화·특화를 통해 모험투자 자본 원활한 공급 및 다양한 자금 조달요구를 충족

④ 기업구조조정

○ 금번 위기를 거치면서 사전적·예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자보상비율이 낮은 기업 등)이 남아 있고 구조조정 추진방식도 다기화되어 있는 상황

⇒ ▪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제 마련
▪ 체계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Ⅲ장. 정책과제

[과제 1] 금융시스템 안정

1-1 건전성 규제 및 감독

가. 현황

-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건전성 규제·감독의 기본틀 재편 논의에 **G-20**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 금융부문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향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

나. 정책과제

<국제적 논의동향>

- ① 자본건전성 강화 : **Tier1** 자본과 **Tier2** 자본의 속성을 차별화하고 규제자본비율을 다변화하여 보통주 자본비율 중심으로 전환
- ② 유동성 규제 및 감독 강화 : 단기지표로 **30일간**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장기지표로 순안정자본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도입
- ③ 레버리지 규제 및 감독 강화 : 자본은 **Tier1** 자본 또는 보통주 자본 등 협의의 자본개념을 사용하고 자산은 가급적 포괄적으로 규정
- ④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식별방식, 규제방식 등에 대해 초기단계 논의 진행중

<단기과제>1)

- 향후 BCBS, FSB 등의 논의, 각국의 영향분석(QIS)를 통해 국제적 최종합의안 도출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영향분석, **FSB**논의 참여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중
- 우리의 경우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할 때 국제적 건전성규제 강화를 상대적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영향분석후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적절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없이 시행할 필요 (단기)

1) 단기과제는 금년 또는 내년 중 검토·시행될 필요가 있는 단기과제를 지칭

가. 현황

- ☐ 금번 위기과정에서 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 증폭 및 대외신인도 하락 등 외환부문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
 -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국제통화 미사용 등 근본적 취약요인이 있기는 하나 실물흐름에 벗어난 과도한 단기차입금 증가도 금번 외환유동성 부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지난 10년간 경상수지 흑자국임에도 단기외채가 05년이후 급증한 데는 선박선수금 등 실물요인도 있으나, 급격한 외화자금 유입(주식·채권) 및 펀드 해외투자 급증(환헤지수요 급증) 등 비실물적 요인도 작용
-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09.11월)하고 금년부터 시행중

나. 정책과제

① 외환부문 건전성 감독 강화 (단기)

- FSB 등 국제 논의동향을 보아가며 국내은행외의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 및 외화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
- 외화차입금 운용 등 외화자금시장 모니터링 강화
- 외화유동성 비율규제를 말잔기준 → 평잔기준으로 변경(중장기)²⁾
- 현·선물, 역외선도거래(NDF), 스왑시장, 주식·채권시장간 연계감독 강화 (중장기)

② 과도한 선물환 헤지 감축노력 강화 (중장기)

- ※ 수출업체의 환헤지 다양화 유도 및 수출·수입기업간 네팅방식 활용 등

③ 스왑시장의 불균형 해소 등 (중장기)

- ※ 통화스왑시장의 재정거래유인 축소방안 강구, 원화국제화노력 강화 등

2) 중장기과제는 정책화하기까지 1~2년 이상의 연구 논의 등이 필요한 과제

(1) 가계부채

가. 현황

□ 09.9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 675.6조 + 판매신용 37.2조원)은 **712.8조원**으로 **GDP대비 69.6%**, **가처분 소득대비 12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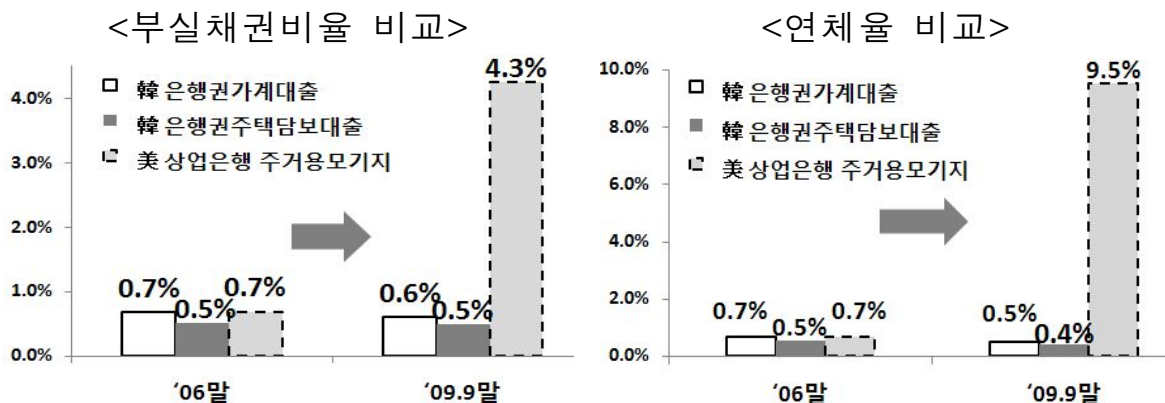
- 지난 98년 이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비해 빠르게 증가

	(98~08년중)	가계대출	(은행)	(제2금융권)	경상GDP
* 연평균 증가율		14.6%	22.1%	8.7%	7.8%
* 98년말 대비		3.9배	7.3배	2.3배	2.1배

- * 지난 01년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244조원)의 약 71.6%가 주택담보대출 증가(174.7조원)에 기인

□ 건전성 등 질적 측면에서 미·영 등 주요국가에 비해 양호함에 따라 전면적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태

-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이 미국 등에 비해 양호



- 최근 수년간 증가한 가계대출도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우량신용등급 및 고소득층 중심으로 증가

* 우량등급(1~4등급) 대출 비중(은행+비은행 %) : (05년) 55, (08년) 61, (09.7월) 66
(미국의 경우 비우량 차입자 대상의 서브프라임대출 비중 확대(01년 8.6%→06년 20%)

* 08.9월이후 가계대출 증가분 중 66.2%는 소득 5분위(상위 20%)에서 발생

- 담보인정비율(LTV, 02년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05년도입) 등 규제 시행으로 주요국에 비해 **LTV비율도 낮은 상태**
 * 주요국 LTV 비율(09.7말) : 韓 47.1%, 美 74.9%, 英 85.2%(07.12말)
- 금융회사 수익성 개선 및 자본확충노력 등으로 **충격흡수능력도 대체로 양호**하고 가계금융자산중 유동성이 높은 현금·예금비중이 높아 유사시 대응능력도 양호(韓 44.3%, 美 16.8%, 英 26.3%)
- 다만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일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중 변동금리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은 데다 일시상환방식이 많은 점은 개선요인으로 지적

나. 정책과제

①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노력 강화 (단기)

- 강화된 **DTI·LTV**규제를 유지하고 소득증가 대비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감독 강화
- 필요시 가계대출규모를 금융안정기의 **DTI** 추세수준 등을 감안 상한선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중장기)
- 저소득층 등의 원리금 상환능력 제고를 지원

※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억제, 만기연장,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

②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유도 (중장기)

-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대출에 대한 **MBS**발행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강화

*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대 → 모기지 채권 매입 확대 → MBS 발행 활성화

(2) 기업구조조정

가. 현황

- 금번 기업구조조정은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의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추진
 - 특히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제도 등)을 추진
- 다만 아직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자보상비율이 높은 기업 등)이 남아 있고 구조조정 추진방식도 다기화되어 체계화 필요

나. 정책과제

①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제 강화 (단기)

- 채권금융회사 중심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재정비
 - ※ 기촉법 시한(2010년말 종료) 연장,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
- 은행지점장 성과평가(KPI)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개선
 - ※ 워크아웃이나 퇴출등급 부여시 해당 지점장의 KPI(Key Performance Index)가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개선

② 체계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중장기)

- 기촉법, 대주단협약 등 다양한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촉법 체계로 정비 방안 강구

가. 현황

- ☐ 예금보호대상·방식의 획일화 등 예금보험제도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채 도입 당시의 기본틀이 그대로 유지
- ☐ 특히 일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저축은행계정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예방 기능 보다는 예금보험금 지급 및 사후적 부실처리에 중점

나. 정책과제

① 예금보호대상 및 운영방식 개편 (단기)

- 예금보험대상을 열거주의 → 포괄주의로 전환
-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일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 예금보험공사의 사전감시 강화, 보험료 인상 등해 도덕적 해이 방지

②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부실방지 기능 강화 (단기)

-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에 조기 참여(적기시정조치 부과시부터)
-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공동검사 등 모니터링 강화

③ 기타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조기 도입(2014년 시행 예정) 등 (중장기)

- 기금운용방법 다각화 등 기금의 안정성·수익성 제고

④ 금융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예금보호방식 강구 등 (중장기)

-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감안, 보호방법 차별화 검토
 - * 보험회사 파산시 예금보험금으로는 충분한 계약자 보호가 불가
-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검토
- 금융회사의 예금보험 가입 승인 및 적용 종료제도 도입 검토

가. 현황

- ① 금번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시스템리스크를 조기에 파악·대처하는 감독장치가 미흡
- ② 감독의 사각지대 및 권역별 규제차익 발생, 리스크의 여타부문 확산시 효과적 대처 미흡 등 권역별 감독체제의 부작용 노정
 - * 개별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동 행위가 집단적으로 나타날 경우(예: 쏠림현상 등) 금융시장 불안 초래
- ③ 기존 감독기능은 수요자 위주의 시각이 부족하고 감독역량이나 제도도 아직 선진수준에 비해 미흡

나. 정책방향

① 체계적 거시건전성 감독시스템 마련 (단기)

- 시스템리스크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
-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등
- 쏠림현상 등 시스템리스크에 대비한 선제적 감독장치 마련
 - ※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금융회사간 '공식약정'을 체결하되 필요시 감독당국이 직접 '시정조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

② 권역별 감독체제 → 기능별 감독체제로 전환 (중장기)

- 우선 거시건전성 감독, 복합금융그룹 감독, 소비자보호 등의 영역에서부터 기능별 감독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점차 확대
 - 특히 외국의 통합감독기구(예: 英 FSA) 사례를 감안, 리스크별·수요자중심(예: 도매금융, 소매금융) 감독·검사체계 구축
- 증권시장 감시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증권시장 감시기능을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운영 검토(예: 日 금융청의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등)

③ 권역별 금융업법 체제 →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중장기)

- 우선 개별 금융업법과 별개로 기능별 입법을 추진(예: 영국, 호주 등)하되 추후 각 금융업법을 기능별 법체제로 점차 전환
 - ※ (예시) 인·허가부문(설립·주요주주·임원요건 등), 금융상품 판매 부문,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부문, 제재부문 등

④ 감독 패러다임 개선과 역량 강화 (중장기)

- 금융감독·검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
 - ※ (예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공표
- 리스크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한 감독역량 강화
 - 직무교육 강화 및 외부 리스크전문가 채용 확대
 - 종합검사 → 취약부문 중점검사, 현장검사 → 서면검사, 위규적 발중심 → 리스크 중심의 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 특히 검사인력의 전사적 활용체계(공동 풀제)를 확립하고 각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필요 부문에, 적기에, 필요인력만을 투입하는 효율적 검사체제 구축
- 감독·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제도 개선
 - 개인 : 신분적 제재 →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
 - ※ 특히 불완전 판매, 자산운용한도 의무 위반, 부실경영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징금체제로 변경
 -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자율규제 강화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⑤ 기능별 감독·규율(법률)체제, 리스크중심·수요자 친화적 감독·검사체제 확립 (중장기)

가. 현황

- ☐ 개별법으로 지급결제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통일적·체계적 규율 측면에서 미흡(특히 일부사항은 법률이 아닌 내부규정으로 규율)

※ BIS 핵심원칙에 의할 경우 지급결제의 정의, 참가자 적격성기준, 참가 규정·절차, 시스템리스크 방지, 보안 등의 체계적 규율이 미흡

나. 정책과제

① BIS 핵심원칙을 반영한 체계적 규제·감독시스템 확립 (단기)

- 지급결제 정의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급결제 감시·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 공통의 지급결제 준수기준 마련, 지급결제 운영기관의 세부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 심사 및 필요시 변경 명령 등 지급결제관련 정책 및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통일된 지급결제 참가자 적격성기준을 마련하고 지급결제 관련기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

※ 참가자 및 지급수단 적격성은 국제결제은행(BIS) 핵심원칙에 기초

※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 등 지급결제 관련 기본 인프라를 운영하고 공인인증 등 업무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규율장치는 사실상 전무 → 법적 기구화 추진

-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지급결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관간 효율적 역할체제를 정립

② 글로벌 스탠다드(예: BIS 핵심원칙 등)에 맞는 지급결제 관련 감독시스템 확립 (단기)

③ 국제기구(CPSS, Committee on Payment & Settlement System) 가입추진 (중기)

가. 현황

-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효율성 및 민간영역과의 마찰 문제 등 개선과제가 대두
- 특히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보증을 점차 정상화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

나. 정책과제

① 산은 민영화 추진에 따른 정책금융공백 최소화 및 보증확대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단기)

- 시장마찰 문제 해소를 위한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회사 개편 등에 따른 정책금융공사 기능 정립 및 효율적 자금지원체제 마련
- 벤처투자 유도를 위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
- 한시적·예외적 보증확대조치의 점진적 정상화

② 정책금융의 역할 및 지원방식 등의 효율화 (중장기)

-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리스크 등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예: 미래성장산업 또는 발전 초기단계 산업인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
- 정책금융기관간 또는 민간금융회사와의 업무중복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민간금융회사를 활용한 지원방식(예: 전대방식) 추진
- 투자(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보증 지원 확대
- 보증리스크 관리시스템 개선, 신용보증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방안(예: 전담기구 설치 또는 아웃소싱 등) 강구

③ 정책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중장기)

- ※ 정책금융공사, 신·기보, 기업은행 뿐 아니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금융기관간 중복지원 방지 및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연계강화방안 검토

[과제 2]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2-1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가. 현황

- ☐ 글로벌차원에서 금번위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개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중

* OECD 권고안('09.6월), 英 Walker review ('09.11) 등에서는 이사회 경영진 견제 역할 및 책임강화 등을 제시

* FSB는 단기성과위주의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건전 보상체계 원칙'을 마련하여 권고

- ☐ 우리도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과 중장기리스크를 감안한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이미 마련·시행중

나. 정책과제

① 증권·보험 등 비은행권 사외이사제 개선방안 강구 (중장기)

② 임원,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 강화 (중장기)

- 임원 등의 적격성 요건에 대한 주기적 심사제도 강화

- 은행법상의 적격성요건을 재점검하여 객관성을 강화

- 저축은행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되 업권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

③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개선 (중장기)

-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감사와의 역할 구분 명확화

-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및 전담임원의 역할·지위 강화

- 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④ 연기금·공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및 소유구조와 연계한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색(중장기)

가. 현황

- ☐ 위기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강화되는 추세
 - *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청(CFPA) 설립방안이 논의중
- ☐ 그간 우리는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도·감독·관행·인식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홀

나. 정책방향

① 국제기준에 맞는 사전적·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마련 (단기)

- 공시, 약관, 광고,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전적 보호제도 재정비
- 특히 상품설명의무, 판매채널 자격요건·보수·교육 및 불완전판매책임 등을 대폭 강화
- 분쟁조정과 검사·제재 연계, 위법행위자 처벌 강화, 금전적 제재(과징금 등) 도입 등 사후적 보호제도 강화

② 자율규제기능 대폭 강화 (단기)

- 민간자율기관(예: 투자자보호재단 등)의 교육·홍보·소비자평가(Consumer Report)기능 확충방안 마련
- ※ 금융회사는 협회 및 민간자율기관(예: 투자자보호재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검토

③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 확충 (단기)

- 현행 감독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감독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
- ※ 금융위내 금융소비자보호전담부서 운영,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금감원의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역량 강화 등

④ 통합적 규율체제 마련 (중장기)

- 추후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⑤ 금융교육 강화 및 체계적 추진 (중장기)

가. 현황

-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우리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
 - * 14세미만 인구대비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2020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회하고 2050년에는 일본, 독일을 추월할 전망
- 반면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 건강·간병보험 등 새로운 금융상품과 자산관리를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자산 확보 및 금융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나. 정책과제

①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여건 조성(중장기)

- 신탁, 보험 등이 연계된 복합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율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 국공채, MBS, 물가연동채 등 장기채 시장 육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기 자산운용을 지원

② 고령화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채널을 선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 (중장기)

- 현행 판매채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거쳐 종합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 이 경우 금융회사 퇴직자 등 금융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창업 및 취업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
- 금융자문서비스의 경우 고도의 중립성·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판매채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높은 진입요건을 부과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
- 연금, 장기보험, 보장상품에 대한 수급권 강화를 위해 관련 금융회사 재무건전성을 지속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검사·제재 강화

③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중장기)

- 개인연금제,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형 상품에 대한 현행 세제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가. 현황

- ① 금번 위기 이후 글로벌차원에서 신용평가의 신뢰성, 이해상충, 과점체제, 등급산정의 불공정성, 규제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
- ②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유기반 확대 및 신용도 정확성 제고 필요

나. 정책과제

①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단기)

- 신용평가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투명성 제고, 공시·감독 강화, 자회사·관계회사간 방화벽 설치 등

② 신용정보 수집 채널 확대 및 분석능력 제고 (중장기)

- 우량정보 공유 유인 제고, 공공정보 수집 및 활용제한 개선, 신용분석 도구 개선, 해외기업 정보 확대 등 정보공유 기반 확대
- 기업CB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은행권에서 신용카드, 신용보증회사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업권별 협회와의 제휴를 통해 참여회사 확대
- 정보분석능력 제고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신용정보 축적 확대

③ 신용정보와 신용평가는 보호대상, 정보제공 방법·목적 등이 상이하므로 신용정보법과 신용평가법으로 분리 (중장기)

2-5**녹색금융**

- ① 녹색금융 지원기준, 리스크관리기준 마련 (단기)
- ② 민간자금의 녹색부문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속 발굴 (단기)
 - 보증우대 등으로 민간대출 규모 확대
 - 우수녹색기업 중심의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 ETF 상장 유도
 - 산업별 감축의무 할당에 따른 탄소저감시설 투자자금, 친환경 건물·도시 건축자금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 (중장기)
- ③ 범아시아지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로 발전 (중장기)

2-6**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①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중장기)
 - 금융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추진

2-7**금융산업의 공익성**

- ①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중장기)
 - 금융회사에 내부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수립 및 업무수행시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
 - 경영실태평가에 사회공헌활동을 감안

2-6**개인채무자 구제제도****가. 현황**

- 현재 법원중심 제도(개인회생, 파산)와 사적제도(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바, 지나친 채무자 친화적(debtor-friendly) 구제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신용질서를 훼손할 가능성

나. 정책과제**① 신용질서 확립과 채무자 회생지원이 균형된 제도 확립 (중장기)**

-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은 회생·파산 신청시 채무자들의 성실한 사전 자구노력 여부 확인
- 주택담보채권 별제권 제한은 그 부작용을 감안, 신중히 접근
- 대부업 등 사적구제제도 비참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마련

2-9**금융지주회사 체제 활성화****①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체계적 감독강화 (중장기)**

※ ① 모회사금융그룹 ②외국계금융그룹 ③금산복합체로 구분 가능

- 지배주주의 독점적 경영 및 비정상적 거래 등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체계적 규율을 위한 법적 정비 추진

②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시너지 및 업무효율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장기)

- 중복업무 통합을 위한 자회사 설립요건을 완화
- 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검토

* 결산기가 상이한 자회사들도 연결납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연결납세 기준(현행 100% 지분율의 경우에만 허용)을 완화하는 한편 그룹 내부 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

[과제 3] 금융의 글로벌화

1 현황

① IMF이후 해외자본의 국내유치 위주의 개방화 전략은 급속히 진행된 반면 현지화를 통한 해외진출은 미흡

- 금융 중심지를 위한 노력은 그 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
-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05년 이후 펀드를 중심으로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금변 위기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② 위기이후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 및 금융시장 변화는 후발주자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선진국시장과 달리 아시아 자산운용시장은 향후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임에 따라 아시아시장을 겨냥한 글로벌화전략은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임
- ※ 중국·한국 연금시장은 연평균 20% 내외로 급증하고 아시아신흥국 및 중동지역 등의 국부펀드도 급성장 추세
- 이에 따라 중국, 일본 등 금융위기 피해가 적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

중국	①중국공상은행 ·남아공 최대 Standard Bank 지분 20%(56억불) 인수 (07.10) ·태국 ACL은행 M&A(14억불) 추진 발표 (09.6) ·캐나다 Bank of East Asia 지분 70%(7200만불) 인수 (09.6) ②중국초상은행 ·홍콩 Wing Lung Bank 지분 53%(47억불) 인수 (08.6)
일본	①미쓰비시 UFJ그룹 ·미국 Morgan Stanley 지분 21%(96억불) 인수 (08.10) ②노무라홀딩스 ·Lehman Brothers 아시아법인(2.25억불) 인수 (08.9)
호주	①ANZ ·영국 RBS 아시아네트워크(5.5억불) 인수 (09.5)

◆ 기존 “inbound”중심의 “Hub”전략에서 “outbound”를 동시에 추진하는 “Hub&Spoke”전략으로 변경

- 특히, 아시아 국가의 높은 성장률 및 역내 자산증가세 등을 감안, 아시아지역을 겨냥한 중심지 전략 추진

가. 금융중심지 정책

① 특성화된 중심지 전략 추진 (중장기)

- 자산운용업 중심의 기존 전략과 함께 파생상품, 인덱스 펀드, IT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

② 국내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중장기)

- 서울-부산 등 중심지간 경쟁보다는 연계강화를 통한 집단적 경쟁력 확보에 주력
 - * 뉴욕-시카고-보스턴, 런던-에딘버러-맨체스터-더블린 등의 사례 참조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 마련
 - 세제, 법률, 회계 등 관련 인프라 및 주거환경 동반 개선

나. 금융회사 및 금융자산의 글로벌화

① 아시아 금융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장기)

- 아시아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화와 업무기반 확충, 포트폴리오 투자 등 아시아 금융네트워크 구축에 주력
- 이를 위하여 금융인프라 패키지 수출 및 이와 연계한 국내금융회사의 해외 동반진출방안을 모색

※ 매매거래·예탁결제 등 자본시장시스템(거래소·증권금융·예탁결제원·Koscom), 예금보험, 부실자산처리, 구조조정, 정책금융지원체계 등

② 국내 금융회사별 차별화된 글로벌화 전략을 마련·추진할 필요 (중장기)

- 은행은 현지화기조를 강화하여 현지영업기반을 마련

※ 산탄데르 은행사례

- 우선 언어·관습 등 문화적 관점에서 시장침투가 용이하고 잠재적 성장성이 높은 남미지역을 대상으로 현지화전략 추진
- 이를 위해 현지의 중소은행 인수 → 현지인력 흡수 및 현지 영업 네트워크 구축하여 대형은행 인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 현지법인 경영진의 현지화 및 국가간 유연한 브랜드 마케팅 실시
- 이러한 과정을 겪은후 대형은행 인수를 통해 시장지배력 확보

- 금융투자회사는 우선 해외자금 조달 및 유치 중개에 주력하되 이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아울러 아시아시장의 현지화도 추진
- 보험업은 국내시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시장을 중심으로 점진적 국제화를 도모

※ 효율적 글로벌화 추진 방향

- 글로벌화 전략은 현지화 전략, 지역전략, 퇴출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 → 글로벌화 조기 정착, 글로벌화 비용 최소화

<현지화 전략>

- 1단계 : 정보수집 및 사무소 설립, 글로벌 인재 육성
- 2단계 : 현지의 국내지점과 소형금융회사 간 M&A, 국내 임원과 관리자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 3단계 : 현지 대형금융회사와의 M&A, 현지인과의 공동 혹은 단독 경영체제 구축

<지역 전략>

- 1단계 : 인접국가 및 신흥국가 중심의 선별적 진출
- 2단계 : 주요 선진시장 소규모 진출
- 3단계 : 선진 및 신흥시장에 대한 적극적 진출

<퇴출 전략>

- 부실하거나 영업이 부진한 사무소 및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통합, 폐쇄 등의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 고려
- 정부는 당국간 공조를 통해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초점

③ 과도한 해외진출로 인한 부실화 방지를 위해 유동성 및 건전성 감독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 (중장기)

④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외환시장 안정성, 국내 자산시장의 안정화, 금융산업의 글로벌 투자역량, 해외자산 관리체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중장기)

- **미시적 측면의 필요성** : 글로벌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글로벌 투자역량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개선, 현지화에 대한 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
- **거시적 측면의 필요성** : 자산시장의 안정화, 중장기 자본계정의 자유화 여건 조성, 환율관리비용의 완화, 국가위험의 완화에 기여
- 다만, 금융자산의 글로벌화가 국내자산 투자에 대한 유인 축소와 해외로 급격한 자본이탈(sudden outflow) 초래,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 확대 등을 초래하여 환율변동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해외자산에 대한 효과적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과도한 쏠림현상 등에 대한 거시감독을 강화할 필요
- 금융자산의 전략적 해외투자과 관련,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제고하되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추진계획을 마련

[과제 4]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은행산업

가. 현황

① (건전성) 금번 위기과정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취약요인이 노정

-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외화유동성문제가 재발
- 원화유동성도 그간의 자산확대 경쟁으로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위기과정에서 은행채 상환 애로에 봉착
- 특히 이러한 자산확대경쟁 결과 예금은행의 예대율(CD 제외)은 08.9말 139.4%를 시현

② (수익성)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데다 금융투자회사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수신경쟁이 격화되는 등 이익창출여건이 악화되는 추세

- 명목순이자마진은 05년 2.81% → 09.6말 1.85% 수준으로 하락
- 핵심이익률은 04년 2.71% → 09.6말 1.80% 수준으로 하락

③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의 규모는 영세한 상황

- ※ 세계 1000대은행(The Bank지)에서 우리금융(81위), 국민(87위), 신한(89위)을 차지하여 우리 경제규모(08년 명목GDP기준 세계15위)에 비해 영세
- ※ 08년 우리금융의 총자산 규모는 세계1위 은행의 6.6%, 10위 은행의 12.25%, 50위은행의 53.1%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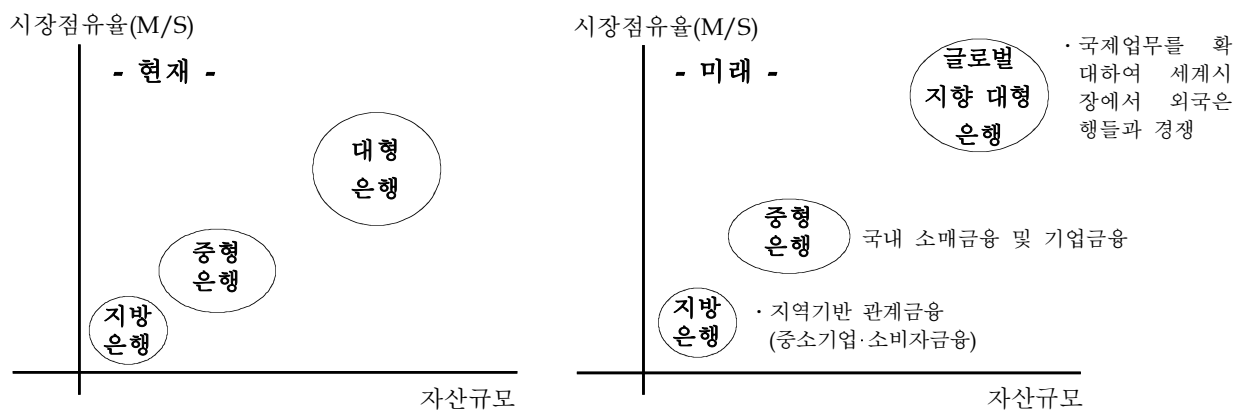
④ 글로벌화 측면에서도 외국은행에 비해 열세에 있는 상황

- ※ 국제화정도를 나타내는 TNI(Transnationality Index)는 외환은행이 11.1%로 국내에서 가장 높으나 UBS(76.5%), Citigroup(43.7%) 뿐 아니라 일본의 Mitsubishi UFJ(28.9%)보다도해 현저히 낮은 수준

나. 발전방향

□ 은행별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경로를 차별화하고 대외경쟁력 제고

- (대형은행) : 글로벌화, 겸업화, 합병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의 리딩뱅크 출현
- (중형은행) : 국내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 업무에 주력
- (지방은행) : 지역기업 및 고객 등을 중심으로 관계금융 강화



다. 정책과제

①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 추진 (단기)

- 우리지주회사 민영화를 우선 추진하고 산은은 우선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 개선 등 체질개선 후 민영화 본격 추진

② 은행의 안정적 성장 유도 (단기)

- 경영효율화 노력 강화
-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구조조정기금의 효과적 운영, 중소기업 상시신용위험 평가의 내실화 등

- 은행 및 은행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파악 및 측정 정교화
- 국제적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내부유보 확보, 보통주 증자 확대 등 자본의 질 제고
- 신용평가 기준 개선, 대출심사자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신용 평가능력을 제고 (중장기)

③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저원가성 수신기반 강화 등 수익기반 확충

- 펀드판매 관련 소비자 신뢰 회복 (단기)
- 안정적 수신기반 확보 지원 (단기)
- 영업이익경비율(**cost-to-income ratio**) 개선 (중장기)
-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단일직군제를 복합직군제로 전환 검토 (중장기)

④ 국내은행의 '글로벌화'를 내실있게 추진 (중장기)

- 해외진출 은행의 현지화 촉진 등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제조업 기진출국 등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방식 활용
 - 해외진출시 컨소시엄 구성, 합자 방식 등 현지은행과의 공조체계 구축

- 국내은행은 해외진출에 앞서 핵심역량 강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 해외진출 대상국 및 진출업종의 신중한 선정으로 쏠림현상 완화 필요
- 효과적 현지화를 위해 단계적 현지화 전략 추진
- * 스페인 Santander은행은 중남미 시장 공략시 '지점설치 → 현지 중소형은행 인수 → 현지 대형은행' 등의 방식으로 현지화 추진
- 정부는 진출지역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 ※ 국내은행 본점과 해외점포를 통합하는 종합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 등

가. 현황

<증권산업>

① (수익구조) 위탁매매 중심의 취약한 수익구조

- 위탁매매 비중이 너무 높고 초대형 M&A 자문, 유가증권 인수 등 투자은행업 비중이 낮음
- * 전체 증권사의 부문별 순 영업수익 현황을 보면, 위탁매매가 평균적으로 60% 전후의 수익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은행 부문은 5~7%로 가장 낮은 수익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② (글로벌 경쟁력) 자본규모가 영세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및 전문 인력도 부족

- '08년 기준 국내 3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글로벌 IB에 비해 영세한 수준
- *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자기자본 규모는 각각 660억달러와 730억달러로 우리나라 대형 3사 자기자본 규모의 30배를 넘는 규모
-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해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영업
- * '08년 기준 국내 증권사의 국내지점 수는 1,755개이고 해외현지 법인 및 지점, 해외사무소가 각각 37개와 33개
- 전문인력 자격제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저하

<펀드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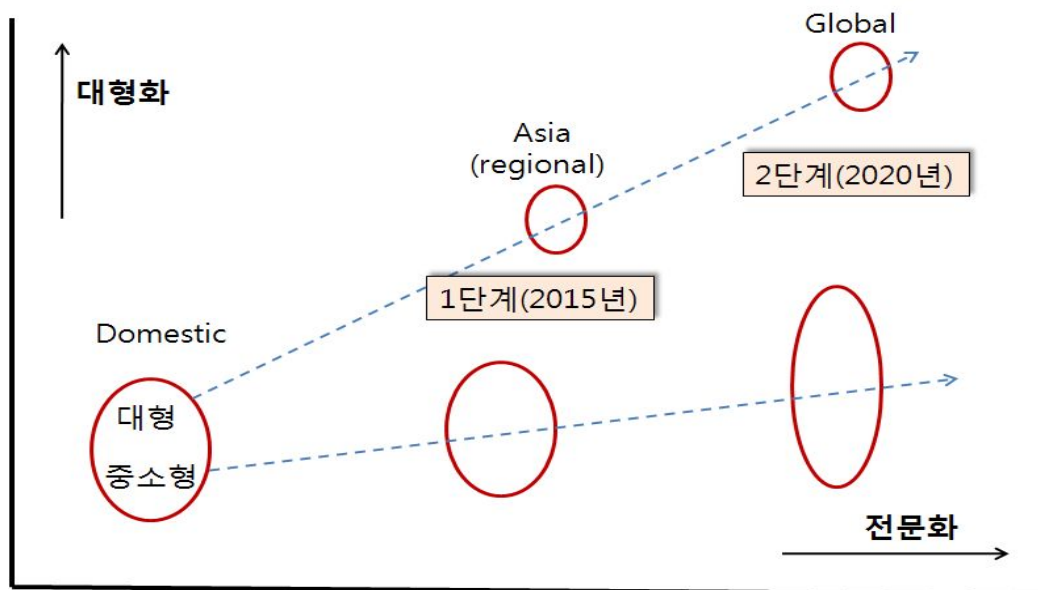
① (글로벌 경쟁력) 국제적 네트워크 및 지명도를 갖춘 자산운용사 부재

② (시스템리스크) 금번 위기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유출(fund run)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은 제기

나. 발전방향

<증권산업>

- ☐ 자본규모 확충 및 전문화·특화를 통해 모험자본을 원활히 공급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
- **(1단계)**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투자은행이 나타나고 중소형 증권회사의 특화가 충분히 심화
- **(2단계)** 글로벌 투자은행이 탄생됨과 동시에 특화된 증권회사의 세계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펀드산업>

- ☐ 해외진출 역량이 확보된 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판로를 적극 개척하여 펀드의 대형화·글로벌화를 추진

다. 정책과제

<증권산업>

① 합병 등을 통한 자본규모 확충과 함께 전문화 유도 (단기)

- 대형사는 자발적 합병 및 자본확충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충분한 위험인수능력을 확충
- 독창적 금융투자상품 개발에 대한 권리보호 등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의 전문화 지원
 - 전문인력 및 특화된 사업계획 등 질적 평가를 바탕으로 신설증권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② 자격증제도 정비, 증권사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전문인력을 양성 (중장기)

③ 아시아 등 지역시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글로벌화 추진 (중장기)

-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아시아 역내의 진출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역내 시장의 투자은행업무를 주도하는 regional player로 성장

<펀드산업>

① MMF 안전장치 강화 (중장기)

- 긴급한 경우 펀드환매 일시 중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집중투자 규제 및 펀드의 유동성관리 장치 보완

③ 펀드시장의 경쟁구조 정착 (단기)

- 펀드 판매채널 확대,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확대, 수익률·보수·수수료 등 펀드정보 공시 강화 등

④ 자산운용사의 대형화·글로벌화 (중장기)

- 개인연금·퇴직연금시장 확대를 통해 국내 성장기반 마련
- 해외자회사 설립 등 해외판로를 적극 개척
- 중국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

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규제를 원칙적으로 일원화하되 국제적 논의 동향을 감안하여 시스템리스크 및 투자자 보호 규제는 강화 (중장기)

가. 현황

① 불완전 판매 등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부족

- * 최근 보험회사와 모집조직 간 ‘제판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보험소비자 보호나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②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수익구조 다각화 미흡

- * 획일적 사업모형, 전문성 미흡, 해외진출 부진 등으로 성장동력 발굴이 미흡하며, 업무영역 제약으로 수익원이 다각화 되어 있지 못함.

③ 국내영업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화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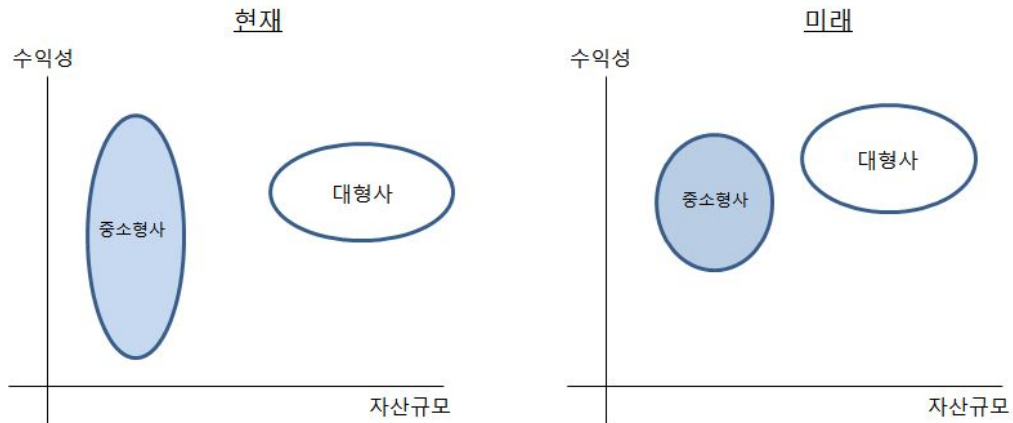
- * 보험회사 해외사업 비중('09.6월말) : 생명보험 0.28%, 손해보험 0.5%

④ 경제·사회·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리스크 확대 우려

- *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등으로 비재무적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변화에 따라 위험노출 규모도 확대

나. 발전방향

- ☐ 대형사는 상장,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화된 우량회사로 성장하고 중소형사는 전문영역에 특화하여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
- ☐ 이와 함께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 수행



다. 정책과제

①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 모집조직 · 보험금 지급기준 · 약관 · 분쟁조정 등의 분야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 (중장기)
- 특히, 모집조직의 부실판매에 대한 자기책임, 보험판매채널의 자격요건, 보수교육 등의 강화를 통해 모집조직을 선진화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 · 검사 강화 (단기)
- 장애인 · 고령자 · 고위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보험 개발 확대 (중장기)

※ 장애인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금 또는 세제혜택 확대,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②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 · 간병 · 연금 등의 상품과 사회적 위험 중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의 개발 지원 · 촉진

- 노후 대비 건강보험상품의 다양화 지원 (단기)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세제지원 확대 등 검토 (중장기)

-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에 대한 법규 강화를 검토하고 거대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중장기)

③ 보험회사의 글로벌화 및 전문화 촉진 (중장기)

- 대형사는 상장 등으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여, 신흥시장에서 보험회사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외진출 활성화
- 중소형사는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화 추진

④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단기)

- 거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통계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 공제계약 정보의 집적 등을 통해 보험사기 인지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강화

가. 현황

① (저축은행) 전통적 영업기반인 서민금융보다 PF대출 등 고위험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리스크가 확대

- 특히, 외형확대 과정에서 자산은 증가하였으나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여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화 심화

② (상호금융기관) 개별조합의 취약한 인력구조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능력 취약

③ (여신전문금융회사)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자금력 향상, 자본시장의 발전 등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시설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의 도입 취지가 다소 퇴색

- 일부 여전사의 경우 부수업무인 기업·가계 대출 등의 취급을 확대하고 있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업종과의 차별성 약화

④ (서민금융) IMF 위기이후 금융소외자가 다수 발생

- 서민금융은 상업적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려운데다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가 외형확대 및 고위험자산 투자에 주력하여 서민금융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위축

- 서민금융공급 부족 → 사금융이용 증가 → 신용불량자 편입 → 경제적 자립기반 붕괴의 악순환 초래

나. 발전방향

□ (저축은행)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성장

- 개별 저축은행이 각각 특성에 따라 서민 및 저신용 중소기업 대상의 최적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
- 저축은행은 자산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지역기반을 토대로 소매 금융업에 주력하는 내실경영 유도

□ (상호금융) “지방의 조합원과 서민대상의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로 발전

- 중앙회 중심의 부실조합 구조조정, 자산운용 체제 구축

□ (여신전문회사) “자본력과 신용도에 근거한 종합여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

-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을 4개 업종(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으로 구분
- (제1안) 대부분의 여전사가 2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및 소비자금융업을 묶어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
- (제2안) 할부금융, 시설대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을 현재와 같이 임의등록제로 하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금융업을 강제 등록제로 운영하는 등 규제 차등화를 위해 현행 4개의 여신전문금융업종에 소비자 금융업을 신규추가

* 소비자금융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 및 무담보 대출(어음할인 포함)을 의미

□ (서민금융) 제도권금융회사의 서민금융공급체계 우선 구축

- 시장기능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등 대안적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장기능을 보완

< 저축은행 >

① 저축은행 부실화 억제를 위한 감독 강화 (단기)

- 무리한 자산확대 억제하고 대형 저축은행은 지방은행 수준으로 건전성 감독 강화
- 소규모 저축은행은 외형확대 억제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발전 유도
- 부실채권 정리 및 신용평가시스템 공동개발 등 중앙회 역할 강화

②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기능 강화 (단기)

- 부동산PF 등 도매금융 성격의 거액여신을 축소하고, 서민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기능 강화
 - *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취급 한도를 총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거액여신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 소매금융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③ 부실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 (중장기)

< 상호금융회사 >

① 연합회·중앙회 역할 제고 (단기)

- 단위 조합의 취약한 인력구조를 감안하여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앙회·연합회의 조합 지원기능 강화
- 연합회·중앙회의 비대화 방지와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 70%) 도입

② 1 기초단체당 1 조합의 원칙하에 조합간 합병 추진 (중장기)

< 여신전문금융회사 >

① 여신전문금융업 개편 (중장기)

- (제1안)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및 소비자금융업을 묶어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
- (제2안) 현재 4개로 구분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소비자금융업을 신규 추가

② 저신용자 금융서비스 공급 (중장기)

- 여전사의 본업무에 소비자금융업무를 추가하고 대출업무 취급 비중 완화

③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체크카드·직불카드 결제범위를 대폭 확대 (단기)

< 서민금융 >

① 금융권별 역할을 정립하여 공급측면 중층구조 확립 (단기)

-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소비자 금융시장 진출 유도 (단기)
- 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저신용층에 대한 서민대출을 확대하도록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단기)
- 여전사는 제도개편(소비자금융업 신설)을 통해 소비자금융을 직접 취급토록 유도 (중장기)
- 대부업 감독강화로 시장규모를 축소하고, 대형대부업체는 중층구조 확립 이후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 검토 (중장기)

※ 제도권 서민금융체계(예시)

	현행		개선방안
은행	· IMF 위기이후 위험관리 강화 · 평판위험(Reputation Risk) → 은행권 서민금융 부재	→	· 자회사 방식으로 소비자금융에 진출
저축은행	· 외형확대 경쟁 · PF 등 고위험 대출 · 예보제도에 무임승차 →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 위축	→	· 과도한 자산확대 억제 · 소액대출평가시스템 개발 유도 → 지역기반 서민금융에 주력
상호금융	· 여신심사역량 부재로 낮은 예대 율(중앙회 재예치)	→	· 소액신용대출상품 공동개발 등을 통해 조합원 신용대출 확대
여전	· 자동차 할부 리스 등 위주로 영업	→	· 소비자금융업을 신설하여 서민금 융 확대 유도
대부업	· 서민금융시장 공백을 계기로 규 모 확대 및 소비자피해 급증	→	· 시장규모 축소 유도 · 대형 대부업체는 소비자금융업으 로 전환 검토

②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공급 대상에서 경시될 수 있는 저신용층 문제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해소 (단기)

※ 非제도권 서민지원 체계(예시)

①	·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집단	→	·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복지정책으로 접근
②	· 현재 경제활동능력이 없지만 미래 경제활동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	→	· 미소금융 등 대안금융
③	· 경제활동능력이 있으나 기존채무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정상적 금융공급이 어려운 집단	→	· 신용회복 지원제도 및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과제 5] 금융시장 효율화

5-1

단기금융시장

가. 현황

- ☐ 금번 위기 과정에서 단기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
 - 무담보 콜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외부충격 발생시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불안정성이 심화
 - 특히 非은행금융회사의 콜시장에 과도하게 참여함에 따라 지준 시장으로서의 콜시장 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단기금융시장의 기간물(RP 등) 거래가 상대적으로 부진
- ☐ 금리의 기간구조가 미형성되고 지표금리가 부재
- ☐ CP거래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유통시장 발달이 부진

나. 정책과제

① RP 시장을 활성화 (단기)

- 과도한 콜시장 의존도를 완화하고 RP 규제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초단기 자금운용수요를 RP 시장으로 전환
- 이를 통해 단기금리 기간구조 형성,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② CP 수요 → 단기사채수요로 전환 유도 (단기)

- 전자화된 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하여 CP 시장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

③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 개발 (중장기)

- 은행간 자금시장 금리인 한국식 LIBOR 금리 등 개발 유도

가. 현황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간 명확한 역할구분이 없는 상태
 - 특히 코스닥과 거래소 통합이후 “제2부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코스닥시장의 기능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 높은 개인투자자비중(낮은 기관투자자 역할), 단기매매위주의 투기적 행태 및 이로 인한 높은 시장변동성과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및 불공정거래 등이 아직 만연하는 점 등도 문제

나. 정책과제

①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 (중장기)

- 거래소시장은 아시아 대표적 자본시장으로 발전
 - 거래소 국제화를 추진하되 청산·결제기능 및 자율규제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거래소 IPO도 대안으로 검토
- Kosdaq의 기능정상화를 통해 미래 핵심유망산업 지원기지화
 -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해 상장, 공시, 매매 등의 차별적 제도 구축
 - 상장시 성장성·투명성 등 질적요건에 대한 실질심사제 마련
 - 시장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퇴출 확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 IR 의무화 및 마일스톤 공시 도입
 - 단일가 매매제도 및 유동성공급자제도 개선 검토

② 거래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 (중장기)

- 매매서비스 제공비용에 근거한 매매수수료 결정체제 도입

- 일부가격대의 호가단위 개선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
- 기관투자자의 대량매매로 인한 가격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량매매시스템 도입 등

③ 상장기업 공시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 및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 (중장기)

- 상습적 불성실 공시와 조회공시 허위답변, 미확정답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시관련 벌점체제 개편
- 상장기업 공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④ 주식관련 신상품 확대 및 간접·분산·장기투자 유도 (중장기)

- 우량 비상장기업의 SPAC을 통한 상장 및 구조조정 활성화 도모
- 채권, 다양한 지수 등에 근거한 ETF 도입을 통해 투자상품의 활성화 도모
- 간접·분산·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투자자 교육 등 정책적 노력 강화

⑤ 공시·회계부담 경감 등 상장부담을 지속 완화 (중장기)

가. 현황

□ 채권시장을 통한 장기안정적 기업자금 지원기능이 미흡

- 주관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채권거래에 있어 단순중개 업무에 치중할 뿐 총액인수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 특히 고수익채권시장은 채권발행이 가능한 중견기업의 수가 적고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
- 채권유통시장도 채권딜러의 시장조성기능 부진, 장외유통시장의 낮은 투명성 등으로 유동성이 저하

나. 정책과제

① 채권 수요확대 및 발행시장 활성화 (중장기)

- 미래핵심산업에 대한 **P-CBO** 지원 확대
- 채권형펀드 및 고수익채권펀드 활성화방안 강구
-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채권발행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실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주관사의 책임성 강화

② 효율적인 채권유통시스템 구축 (중장기)

- **ATS**의 도입을 통하여 국내 채권유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거래를 촉진하고, 장외채권 전자거래 전문기관의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

③ 장기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국 채권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역내채권시장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 수행 (중장기)

5-4**파생상품시장****가. 현황**

- ☐ 우리 파생상품시장은 KOSPI 200 선물·옵션 등 장내파생 위주로 발전하고 장외파생상품은 양적·질적으로 취약
- ☐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차원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논의중

나. 정책방향

- ①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탄소배출권(현·선물), 실물상품 선물 등 상품의 다양화를 추진 (중장기)
- ② 장외파생상품 감독의 효율성 제고 (중장기)
 - 중앙집중거래상대방(CCP) 청산소, 중앙거래정보저장소, 전자거래 플랫폼 도입 및 각 시스템 운영주체 선정·법적근거 확보 등

5-5**자산유동화 및 구조화증권시장**

- ① 상법에 의거 발행되는 ABCP의 공시강화 등 감독방안 마련 (단기)
 - ABCP를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된 단기사채제도에 편입 (중장기)
- ② 자산유동화법→“자산유동화 등 증권화에 관한 법률(가칭)” 전환 (중장기)
 - 자산유동화법에서 자산유동화뿐 아니라 **Covered Bond**, 담보부사채 등 다양한 구조의 증권화를 규율
- ③ 구조화채권에 대한 공시 및 감독방안 구축 (중장기)
 -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소매시장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 및 구조화채권에 대한 과도한 투자 감독 강화 방안

가. 현황

-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나치게 보수적 자산운용 규제 등으로 현행 적립금중 85%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나. 정책과제

① 퇴직연금시장 확대 유도 (중장기)

- 퇴직금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유도
 - 신규채용 근로자 또는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퇴직금 사내유보분 손금산입범위(30%) 단계적 축소, 퇴직금 중간 정산 제한 및 중장기적으로 퇴직금제도 폐지
-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 단기적으로 채권자 우선변제 기간을 확대(3년→5년)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
 - 중장기적으로 DB형의 최저적립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100%까지 상향 조정

② 확정기여형의 주식투자제한(40%) 완화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대한 운용규제 지속 완화 (중장기)

③ 퇴직연금 관련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대한 규율과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규율 체계를 분리 검토 (중장기)